

리튬이온전지 미국 운송규제 대응

관련기관 3곳 한국측 공동의견서 제출 ... 운송비용 200% 증가 우려

미국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에 대해 무역협회 등 3개 기관이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대응에 나섰다. 무역협회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전지연구조합 등 3개 기관은 미국 교통부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한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월14일 발표했다.

의견서에서 “규제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리튬이온전지가 일반 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돼 운송비만 최대 200% 증가한다”며 “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루어지면 제품 사이클이 짧은 IT(정보기술)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, 미국 소비자 불만이 증대하고 재고관리 등 문제가 발생할 것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.

그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해 관련제품을 수송했으나,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고, 기존 사고는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의 취급 부주의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승객 및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
미국은 1월 발화 가능성을 이유로 리튬이온전지의 단락방지 포장을 의무화하고 비행기 당 포장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을 발표했고, 3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15>